

회  
고  
록

민주청년협의회와 이른바  
‘명동 YWCA 위장결혼식 사건’

조성우 (사)국민주권연구원 이사장

무언가를 기록한다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다. 기록자의 주관으로 인하여 그 내용과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된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시각과 그에 따른 서술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이 글은 그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민주청년협의회(이하 민청협)’의 결성 과정과 활동 내용, 그리고 이른바 ‘명동 YWCA 위장결혼식 사건’에 관하여 우선 개략적으로라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에 의해 쓰게 되었다.

‘민청협’의 전신인 ‘민주청년인권협의회’는 1978년 5월 12일 발족되

었다. '민청학련사건'과 긴급조치 위반으로 각각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김병곤과 김봉우가 재구속되자 '민청학련사건' 관련 출소자들은 물론, 구속되었다 풀려난 다른 청년들은 크게 위기감을 느꼈고, 민주화운동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다. 1978년 4월 14일 고은 시인 자택에서 청년 학생 40여 명이, 김병곤과 김봉우를 비롯한 구속자 석방과 동일방직 등에 대한 노동탄압 중지 및 노동 3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시작하였다. 18일까지 계속된 농성 과정에서 청년운동조직의 필요성이 깊게 논의되었고, '민주청년인권협의회'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유신 이후 최초의 공개적인 청년운동조직의 출범이었다. 창립 이후 곧바로, 회장 정문화를 비롯하여 김학민, 문국주, 배경순, 장만철 등 운영위원들은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 '민주청년인권협의회' 창립 직후 출소한 필자는 당연히 이에 합류하여 함께 활동을 시작했다.

8월에 '민청학련사건'으로 감옥살이하다가 5년 만에 석방된 유인태가 인혁당 사건은 조작되었다고 발언했다가 다시 연행되는 일이 벌어졌다. '민주청년인권협의회' 회원 50여 명은 성공회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유인태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이어서 조선일보 앞까지 진출하였으나 일부가 또 연행되어 장만철, 문국주, 박인호가 구류 처분을 받았다. 또한 해산 당한 회원들은 유인태 집에 모여 농성하면서, 그리고 이후 지리산 수련회 등을 거치면서 청년운동조직의 강화 논의가 치열하게 이루어졌다.

'인권' 자를 떼고 본격적인 정치투쟁조직으로 가지는 의견들이 모

아졌고, 1978년 11월 '민주청년협의회'가 출범하게 된다. 당시 '인권'을 폐지는 주장을 강하게 한 죄로 필자는 떠밀려 '민청협' 회장직을 맡게 되었다. 이명준과 최열이 부회장을 맡았고 문국주가 총무, 김경남, 양관수, 홍성엽, 이우회, 이신범 등이 운영위원을 맡았다.

공식적으로 사무실을 내기로 해서 모금도 하고 했으나, 정작 사무실 얻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계약금을 내고 계약을 하고 돌아서면 바로 계약이 취소되었다. 위약금을 두 배로 물어내면서도 건물주들은 완강했다. 몇 번의 계약 파기를 당하다보니 기금은 다소 불어나 있었다. 아무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파고다공원 뒤편 지금 송해길 안에 작은 사무실을 마련했다.

재정사업을 겸하여 번역실을 두었고 번역실장은 김경남이 맡았다. 영어, 일어 번역이 주였고 독어, 불어 등 일감도 드문드문 들어왔다. 출판사들과 우리가 직접 계약하기도 했지만 상당 부분은 동아투위 선배들이 일감을 떼어주어 번역실을 그러저럭 운영할 수 있었다. 사무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민청협회보 발간준비에 들어갔다. 편집책임은 출판사를 하고 있던 이우회가 담당했다.

문국주가 중심이 된 회원 확대 사업은 학교별, 직장별, 직능별, 지역별로 나누어 전국적인 조직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지도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윤보선, 함석헌, 문익환, 이문영, 박형규, 천관우, 계훈제, 백기완, 함세웅, 조화순 등을 지도위원으로 모셨다. 문익환 목사는 지도위원으로 위촉되자마자 재수감되었다. 10월 17일 윤보선, 함석헌, 문익환 등 각계 인사 402명이, 유신헌법 철폐·긴급조치 9호 폐

지 등을 요구하며 '10·17 국민선언'을 발표하고 동조 서명을 호소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문익환 목사를 다시 구속한 것이다.

12월 초 민청협회보 제1호가 나왔고, 곧 이어서 민청협은 민주주의국민연합·인권운동협의회 등 15개 단체와 함께 '12·12선거(제10대 총선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선거 전면 거부를 표명한 것이다. 당시 서명자들 수십 명이 동아일보를 찾아가 성명을 기사화하고 유료광고를 게재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신문사는 거부하였다.

이런 와중에 필자는 평생의 반려 홍연실과 결혼식을 올렸다. '빈털터리가 장가간다'고 이부영, 이호웅, 최민화 등이 '결혼대책위(?)'를 꾸렸다. 결혼식은 흥사단 강당에서 이문영 선생 주례로 올렸는데 그날 따라 날씨가 비바람에 진눈깨비, 우박까지 내리더니 나중에는 활짝 개었다. 누군가가 '두 사람 팔자가 날씨 같을 것'이라고 해서 모두 웃었다. 신혼여행으로 부산 처갓집을 다녀오니 갈현동에 버젓한 단독주택 전셋집이 마련되어 있었다. 고마운 일이다. 갑자기 엄청난 갑부가 된 듯했다.

대통령 선출을 위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통대)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등 선거의 해였던 1978년은 각계의 운동이 크게 고조되는 해이기도 했다. 1월에 정구영, 함석헌, 지학순, 천관우, 박형규, 조화순 등이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국민에게 고향'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유신체제하의 모든 선거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 선거를 보이콧할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2월에는 윤보선, 함석헌 등 각계 인사 66명이 유신체제와 학원·언론탄압을 비판하는 '3·1 민주선언'을 발표

했다.

노동 쪽에서는 2·21 동일방직 노동자 똥물세례 사건이 터져 나왔다. 어용노조와 당국의 탄압에 맞선 동일방직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은 ‘YH무역’과 ‘원풍모방’ 노동자들의 투쟁 등과 더불어 끝내는 그 당당한 모습을 역사 속에 드러내는 민주노조 태동의 서막이었다.

서경원, 정성현 등 가톨릭농민회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마침내 보상의 실마리를 잡기 시작한 4·24 함평고구마 사건은 이후 ‘노풍 피해 보상운동’, ‘안동농민회 사건(오원춘 사건)’ 등을 거치면서 농민운동의 전국적 확산에 발동을 걸었다. 가톨릭농민회의 빛나는 역사였다.

이와 더불어 4·17 부산대 자율화 민주투쟁 선언서 사건이 있었고, 함석헌, 박형규 등 재야인사들이 함께 한 6·26 광화문 연합시위에 앞서 6월 12일 서울대 인문대생 약 3,000여 명이 유신독재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를 벌여 70여 명이 연행되고 9명이 구속되었다.

이미 시민·학생들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예고되어 있던 터에, 서울대생들은 교내에서만 시위할 것이 아니라 시내에서 시위를 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널리 알리고 민주화 운동을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시위 날짜를 6월 26일로 정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3명이 구속되었다. 경찰 당국은 함석헌, 박형규 등 민주인사들과 학생들에 대한 미행, 감시, 연금을 실시하는 등 시위 준비를 방해했다.

그러나 6월 26일 오후 6시경 세종문화회관 앞에는 함석헌, 박형규

등 민주인사와 서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대학생 1,000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경찰의 폭력진압에 해산되었다가 다시 모여 유신철폐 등의 구호와 반체제 노래를 부르면서 행진하였다. 당시 시위에 참가했던 대학생 70여 명이 연행되어, 20명이 구속되고 22명이 구류처분을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권오정 신부 등 신부 5명도 연행되었다.

또한 이 시위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구치소를 비롯하여 전국의 구치소·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양심수들은 광화문 시위와 때를 맞춰 유신철폐 등을 주장하며 옥중 농성을 감행했다. 이 무렵 송기숙, 명노근 등 전남대 교수 11명이 ‘우리의 교육지표’를 발표했고,<sup>1)</sup> 이에 동의하는 전남대의 성명에 이어서 서울대, 이화여대, 연세대, 동국대, 홍익대, 부산대 등 6개 대학생, ‘전대학 민주학생 총연맹’ 명의로 ‘우국 학도 여러분’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이 전국 대학에 배포되었다. 유신헌법 철폐, 학원 자유 보장, 노동자·농민의 인권 보장, 민주 인사와 우국 학생 즉시 석방, 사이버 언론 대오 각성, 박정희 정권 퇴진 등이 그 내용이었다.

민주주의국민연합은 그러한 동력들을 기반으로 하여 출발한 것이고, 이후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으로 발전해 나간다.

---

1) ‘국민교육헌장’의 비민주적 요소 비판과 학원의 민주화, 구속 학생 석방, 인간적 양심에 기초한 교육 등의 내용으로 발표자 전원이 연행되었고 교수직을 해임 당하였다. 두 명의 교수가 구속되었다.

청년, 학생, 지식인, 언론인, 노동자, 농민 등 참으로 붓물처럼 터져 나오는 1978년에 두세 가지만 더 짚어보면, 9월에 고려대생 3,000여명이 '1978 민중선언'을 발표하고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무차별 폭행을 자행하고 52명을 연행하고 7명을 구속했다. 직후 '민주청년인권협의회' 정문화 회장이 연행되었고 2주일 동안 조사 받은 뒤 구류 25일 처분을 받는다.

10월 하순 동아투위의 민주인권일지 사건이 있다. 동아일보와 동아방송에서 해직된 기자, 프로듀서, 아나운서 등 141명으로 조직화된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는 10월 24일 명동 한일관에서 '10·24 자유언론실천선언, 4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 기념식에서 '10·24 4주년 특집: 보도되지 않은 민주일지'를 배포하였다. 이날 기념식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동아투위 홍종민 총무가 종로경찰서에 연행되었고, 이어서 안종필 위원장과 안성열, 박종연 기자가 종로서로 연행되었다. 연행 이유는 이 기념식에서 참가자들에게 배포된 문건 중 '진정한 민주·인권 사건일지'가 긴급조치 9호에 위반된다는 것이었다.

동아투위 회원들과 민청협 회원들을 포함한 민주인사들은 바로 다음날부터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였고, 10월 30일에는 '현역 언론인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하여 민주화와 인권회복을 위한 국민들의 투쟁을 외면해온 언론인의 반성을 촉구하였다. 이 농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11월 3일 동아투위와 조선투위가 인권운동협의회, 해직교수협의회, 기독교교수협의회, 자유실천문인협의회, 민주청년인권협의회 등의 공동 명의로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동아투위의 강인한 투쟁은 그해 연말에 조선투위와 공동으로 발표한 ‘민주민족언론선언’으로 이어져 나갔다.

유신의 마지막 해인 1979년은 팽팽한 긴장 속에서 시작되었다. 1월 4일 대구교도소 양심수 단식농성을 시작으로 1월 12일부터 문익환 목사가 박정희 대통령 취임을 반대하며 17일 간 단식농성 투쟁을 벌인다. 1월 15일 양심수가족협의회는 각 교도소의 인권유린 사태에 항의하고 윤반웅, 강희남, 문익환 목사 등의 병보석 허가와 재소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중지할 것 등 18개 항의 요구사항을 천명하면서 보름이 넘는 농성에 돌입한다.

1월 23일 앞서 기술했던 ‘노풍 피해 보상운동’이 다시 시작된다. 정부가 개발한 신품종 벼 노풍을 농민들에게 강제 재배케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정부 당국은 농민들의 품종 선택권조차 박탈한 채 재배 면적만 높게 책정해놓고, 폭력에 가까운 횡포를 부려가면서 각 시·도·군·면 직원들을 동원하여 목표(1,200만 석) 달성을 위해 농민들에게 노풍 재배를 강제하였다. 가톨릭농민회가 조사한 대로 그 피해는 엄청났으며, 노풍 피해는 자연 재해가 아닌 정부의 강제 행정에 의한 피해였기 때문에 농민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월 23일 충남 홍성군 홍성읍의 노풍 피해 농민들은 ‘노풍 피해보상을 공정히 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홍성읍 사무소 광장에 몰려 나가 집단농성을 벌였다. 이후 농민들의 투쟁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바로 뒤 이어 ‘민청협’은 ‘기독교청년협의회(EYC)’와 함께 재소자 인권 실태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한다. 당시 민청협 회장이던 필자는 곧바로 연행된다.

2월에 접어들면서 민청협은 ‘병역문제대책위원회’를 조직하게 된다. 민청협이 주도했다기보다 병역 문제에 직면한 당사자들이 먼저 조직하고 민청협이 거드는 과정이었지만 이범영을 위원장으로 한 ‘병대위’의 투쟁은 매우 거세었다. 유신 이후 최초로 ‘적들’이란 표현이 등장하였고, 조직적 강도나 그 치열함에서 또 한 번 반독재투쟁의 한 획을 그었다.

그 과정을 설명하자면 박정희 정권은 1969년 3선 개헌 반대운동이 거세게 일어나자 주도적인 학생들을 강제 입영시켰고, 1971년 교련 반대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그해 10월 15일 위수령을 발동하여 200여 명의 학생들을 제적시킨 뒤 강제 입영시켰다. 유신하에서도 정권에 반대하는 많은 학생·청년들이 강제 입영의 대상이 되었는데, 긴급조치 9호로 연행된 학생 중 구속을 면한 이들도 즉시 입영조치를 당했다. 이들은 특수 사병으로 분류되어, 직속상관과 보안사 요원들의 감시를 받고 그 내용은 보고되었다.

긴급조치 9호 이후 학생들 시위가 전국적으로 격렬하게 번지자 박정희 정부는 수형자까지 입영시키고자 하였다. 유신정권은 ‘긴급조치 수형자는 병무사범에 준하며, 3년 미만의 형을 복역한 자는 다시 현역 입영시킬 것’이라는 변칙적인 조치들을 통해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투옥되었다가 출감한 학생들을 강제로 입영시키기로 하였던 것이다. 이에 집단적으로 항의하는 최초의 행동이 ‘병역문제대책위원회 사건’이었다.

1978년 12월 대통령 취임에 즈음하여 형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학생들과 이미 석방시켰던 학생들 109명에게 특별사면령을 내리고 입영 영장을 발부하였다.

복교와 복권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입영 영장이 속속 발부되자,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학생들은 1979년 2월 9일 병역문제대책위를 결성하고 석방 학생들에 대한 보복적 강제 징집조치를 그만두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들은 성명서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부당 징집을 강행하는 것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군복무를 기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사면조치가 복교·복권이 아닌 현역 입영이라면 사면장을 반환하고 재투옥도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월 3일에는 호남지역 ‘병대위’가 구성되었고 이들은 병역의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 것, 퇴학·제명·제적·정확된 학생들을 전원 복교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병역거부운동은 곧 이어지는 NCC 인권위원회와 해직 교수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엠네스티 한국지부, 양심수가족협의회 등 각계의 지지·성원에 힘입어 유신이 최종 파탄 난 이후에도 계속된다. 참고로 ‘병대위’ 핵심 구성원들인 이범영, 반병률, 백계문, 천희상, 서동만, 이우재, 백삼철 등은 1983년 초부터 시작된 민청협 재건 운동의 핵심들로 다시 등장하여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결성의 주역들이 된다.

1979년 3월 1일 ‘민주주의와 민주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이 결성된다. 1970년대 들어 시작된 재야세력 조직화는 그 후반에도 이어졌

다. 1976년의 '3·1민주구국선언', 1977년 3월의 '민주구국선언', 1978년의 '3·1민주선언' 등을 거쳐 1978년 7월 각계 인사 300여 명이 '민주주의 국민연합'을 결성하였다.

1978년 12월 김대중 석방을 계기로 국민연합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발기대회 좌절로 공식적인 집행부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성명전으로 이끌어오던 국민연합은 1979년 3월 1일 체제를 개편하여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으로 발전되었음을 선포하고 윤보선, 함석헌, 김대중을 공동의장으로 선출하였다. 그리고 전권을 3인 의장단에게 맡기고, 더욱 광범하고 충실한 조직 기반을 위해 지역 조직화에 착수했다.

필자는 실무부서 국장을 맡았다. 민청협은 국민연합의 실무 전반을 사실상 총괄하였다.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은 3월 4일 윤보선 전 대통령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발족선언문을 내외에 선포하였다. 선언문은 유신체제 철폐와 민주정부 수립을 당면 목표로 밝히고,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해 평화적으로 투쟁할 것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5월 1일에는 의장단 명의로 성명을 발표했다. 장기 연금과 구치소 내의 심각한 인권침해와 폭행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카터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우려와 아울러 박정희 대통령에게 관계자를 엄중 처벌할 것, 긴급조치를 철폐하고 구속 중인 민주인사를 전원 석방할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그해 3월 9일에는 크리스찬아카데미 사건이 불거진다. 크리스찬아카데미 여성사회 간사 한명숙이 연행되고, 이어 농촌사회 간사 이우

재, 황한식, 장상환과 산업사회 간사 김세균, 신인령 등이 연행되면서 집이 수색당하고 서적이 압수되었다. 또한 정창렬, 김병태, 유병목 등 교수들도 뚜렷한 이유 없이 연행되었다. 연이어 남편이 반공법으로 장기 복역 중인 윤일숙과 그의 조카, 아카데미 농촌사회 교육을 받았던 농민들, 아카데미의 산업사회 교육을 이수했던 노동조합 간부들이 줄줄이 연행되었다.

크리스찬아카데미와 관련된 이들을 불법 연행한 것에 대해서 관계당국은 이 사건이 아카데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불온사상을 가진 불법 지하 용공서클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각 언론에는 ‘불법 용공서클 일당 검거’, ‘불법 용공서클 적발, 크리스찬아카데미 침투’ 등으로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당국이 발표한 이들의 혐의는 ‘현대사상연구’, ‘경제학교과서’, ‘자본론’, ‘공산당선언’ 등 불온서적을 취득·복사·배포하고, 북한을 찬양·동조하는 발언을 하며, 북한방송을 청취하는 등 반공법을 위배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들이 의식화 교육을 통해서 사회주의 사상을 주입했다는 것이었다. 한 달 이상의 수사 과정을 거친 후 ‘용공서클 적발’로 공식 발표된 이 사건은 지독한 고문에 의해 강제 진술된 것임이 재판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용공서클’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앞서 언급한 그해 5월 초 ‘안동농민회 사건’, 이른바 오원춘 사건은 점입가경이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 박정희 정부는 농산물 저가정책 실현을 위해 행정지도라는 명목으로 신품종 강제 경작을 추진하였

다. 이에 적극적으로 농민운동을 전개해온 가톨릭농민회는 쌀 생산비 보장운동과 농협 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정부의 획일적인 영농행정에 대응했다. 1979년 5월 5일 보상 활동에 앞장섰던 경북 영양군 청기 분회장 오원춘이 행방불명되었는데, 20일이 지난 후 가톨릭 안동교구가 오원춘 회원이 납치·감금당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안동교구 농민회 사건’이 드러나게 되었다. 안동교구는 1979년 7월 17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을 통하여 이 사실을 전국에 폭로하였고, 경찰의 답변을 요구하는 농성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서 경북도경은 안동교구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농민운동 탄압이라는 왜곡된 성명서를 배포하였다는 혐의로 신부와 농민회 간부들을 구속하였다. 대통령의 특별조사령, 농민회와 교회에 대한 용공 시비가 일면서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8월 6일 천주교 안동교구에서 신부 120여 명, 신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기도회를 열고, 사제단과 가농회원 80여 명이 20여 일간 항의 농성을 벌이는 한편, 8일간의 단식기도, 가두 촛불시위, 공정재판 요구와 집단 방청활동 등이 전개되었고, 명동성당 기도회에는 14개 교구 700여 명의 사제들이 참석하였다. 각 교구에서는 수많은 기도회에 연인원 수만 명이 참여하는 등 독재정권과 천주교회의 대결 구도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전면전의 양상을 띠어 나갔다. 10월 14일 천주교 안동교구 사제단은 ‘오원춘 사건 보고서’를 발표하여 “경찰 측 발표는 사실과 다르며” 재판 과정에서 경찰의 조작 경위가 폭로되었음을 밝혔다. 그리고 “재판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6월 11일 카터 방한 반대시위는 ‘민청협’이 적극 조직한 사건이기도 하다. “How can a friend of Korean Shah talk about the Human Rights?”, “Carter? Is he Human Rights Cutter?”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미국 대사관 앞뜰에서 카터 방한 반대 시위를 벌였다. 카터 방한의 선발대가 도착하기 이틀 전에 벌인 기습시위였다. 미 대사관 구내에서의 시위는 미 대사관 측이 경찰 투입을 요청하여 시위자 전원이 연행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연행된 이들은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구류 15~25일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다.

카터 방한 선발대가 도착한 6월 13일부터 카터가 한국을 떠나는 7월 2일까지 목사, 신부, 해직 교수, 해직 언론인, NCC 회원, 구속자 가족, 민청협 회원 등은 사복형사들에 의해 감시·미행되거나 연금되었고, 각종 미사나 기도회, 인권강좌, 강연회 등도 제지되었다. 6월 27일 확인된 목사, 신부와 구속자 가족, 청년들의 연금자만 해도 58명이었다. 6월 23일 정오에는 윤보선을 비롯한 목사, 신부, 해직교사, 문인, 정치인, 청년 등이 종로 화신백화점 앞에서 “No Carter No!”, “카터 방한 반대”, “민주주의 없이 안보 없다”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반대 시위를 했다. 외신기자들을 의식한 경찰들은 시위자들을 일단 해산시킨 뒤 각자의 집에서 연행, 즉결 심판에 회부하였다. 문동환(목사), 안재웅(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 총무), 김병걸(해직교수), 이석표(민청협 회원), 박태순(소설가), 김규동(시인), 고은(시인), 금영균(목사) 등 전원 29일 구류 처분을 받았다.

카터 방한 이틀을 앞두고 정부는 서울시내 7곳에 대형 아치를 세

우고 양국 대통령의 초상화를 걸었는데, 그 가운데 광화문 교육회관 앞 육교에 설치한 초상화에 6월 27일 밤 동월교회 집사 이철용과 한신대생 김성중 등이 불을 질러 일부 불타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김성중은 연행되었으나, 이 사건을 공개할 경우 정작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당국에 의해 석방되었다. 카터가 방한했던 29일에는 동아투위·조선투위와 그 가족들, 민청협 회원 등이 한국의 인권 탄압 상황을 폭로하고 양심수 석방과 언론·표현의 자유 보장 등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7월 17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되었던 박형규, 윤반용, 송기숙, 양성우 등과 학생 69명, 교원 3명, 일반인 10명 등 총 86명이 형집행정지로 출소하였다. ‘민청협’은 ‘7·17 석방자 환영회’를 동대문성당(당시 본당신부 김승훈)에서 개최하려 하였으나 경찰의 방해로 좌절되자 준비했던 밥과 김치통을 들고 가두시위를 한 뒤 제일교회에 집결하여 농성에 들어갔다. 농성장에 경찰이 난입하여, 서남동, 이우정, 김경남, 송진섭 등 수십 명이 구타 당하면서 연행되었다.

‘7·17 석방자 환영회’ 참가자들은 민청협 회원들과 함께 동대문성당으로 장소를 옮겨 평화적 집회를 방해한 데 대한 당국자의 공개사과, 부상자 완치, 환영회 개최 보장, 물질적 손해 보상 등을 요구하며 다시 농성을 시작하였다. 7월 31일 ‘민청협’ 주최로 ‘7·17 석방자 환영회’를 다시 가지려고 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재차 무산되었다. ‘민주사회 건설하자’, ‘자주통일 이룩하자’ 등의 플래카드를 걸고 ‘평화적 집회 보장하라’, ‘깡패 경찰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농성은 계

속되었다. 이 농성은 8월 2일 함세웅, 오태순, 양홍 신부 등 정의구현사제단 신부 4명이 공동 집전한 ‘정의와 평화를 위한 미사’를 끝으로 자진 해산하게 된다.

8월 11일 신민당사에 경찰이 난입하여 농성 중이던 YH 여성노동자 172명을 강제 해산한다. 이 과정에서 여성노동자 김경숙이 사망한다. 8월 14일 NCC인권위원회는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YH사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정희 정부를 ‘역사에 없던 폭력 정권’으로 규탄하면서 ‘노동자 생존권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 ‘폭력 경찰의 최고책임자 의법 처단’, ‘국민의 인권 보장’, ‘김경숙 사인 규명’, ‘YH사건 관계 구속자 석방’, ‘기업 풍토 근본적 쇄신’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8월 15일 양심수가족협의회와 EYC, 민청협 등은 ‘YH사건’에 항의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8월 17일 서울시경은 ‘YH사건’ 수사 내용을 발표했다. “주동자·배후조종자 8명을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하고 1명을 수배한다.” “주동자는 YH무역노조 지부장 최순영, 부지부장 이순주, 사무장 박태연 등이고, 배후조종자는 영등포도시산업선교회 총무 인명진 목사, 사회선교협의회 부위원장 문동환 목사와 총무 서경석, 고려대 해직교수 이문영, 시인 고은 등이고”, “YH노조 간부들은 ‘무산계급이 지배하는 사회체제를 건설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명’임을 표방하는 도시산업선교회 목사의 조종을 받아 사회혼란을 조성, 국가사회의 변혁을 획책했음” 등의 내용이었다.

곧바로 한국교회산업선교회 회장 지학순 주교, 자유실천문인협의회, 해직교수협의회, 민청협, EYC, 기독교교회협의회 등의 반박 성명이 나왔다. 산업선교 활동에 대한 정부·여당·어용노총·언론의 왜곡 선전과 보도를 중지하고, YH사건 관련 구속자를 석방하라는 것이었다.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는 ‘YH무역사건’, ‘오원준 납치사건’에 대한 특별기도회를 개최하였다. 5,000여 명의 신자가 참가하여 “종교 활동을 용공으로 몰지 말라”는 등 7개 항의 요구 조건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8월 말 수원성당 인권기도회에서 ‘안동농민회 사건’이 조작이라고 밝히고, 유신철폐를 주장했다고 하여, 함세웅 신부를 형집행정지 취소로 재수감하였다. 9월 초 강원대생 800여 명이 ‘YH사건’ 규탄과 유신철폐 등을 주장하며 교내 시위와 농성을 벌였다. 최윤, 성낙철, 정양언, 이기섭, 전광표, 유경선 등 6명이 구속되었다.

9월 4일 대구시내 3개 대학 연합시위가 있었다. 계명대, 영남대, 경북대 등 3개 대학의 학생들이 연합하여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경북학생협의회’를 결성하고, 협의회 명의로 선언문 ‘이 어둔 역사의 조타수가 되지 못한다면’을 발표하였다. 각 대학에서 동시에 선언문을 낭독한 뒤 시위를 하였으며, 같은 시간 대구시내 중심가에도 선언문이 살포되었다. 대구시 중앙동의 대구은행 본점 옥상에서 선언문 수백 매가 살포되었는데, 선언문은 ‘YH사태의 진상 규명과 농협의 수탈 행위, 노동3권 유보조항 철폐’, ‘김경숙 양의 죽음에 사죄’, ‘외세의 존적 경제정책 중지’, ‘유신 철폐 및 기본권 보장’, ‘구속 민주인사 석방 및 강제휴학, 강제입영 중지’, ‘교수 재임명제 철폐 및 학내 모든

경찰요원 추방’ 등 6개 항을 결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사건으로 권오국(계명대), 임광호, 하중호, 임진호, 정동남(이상 경북대) 등 5명이 구속되었다.

9월 18일, 경희대생들이 ‘전체 대학생의 뜨거운 가슴에 호소한다’는 제목의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유신헌법 철폐, 및 독재정권 퇴진, 학도호국단 해체, 노동자 농민의 인권 보장 등의 내용이었고, 정해량, 윤종천 등이 구속되었다. 9월 20일 서울대생 수백 명이 ‘민주민중선언’, ‘1979년 학원민주화 선언’, 및 ‘근로민중생존권 수호 선언’ 등 3가지 선언문을 배포하고 시위를 하였다. 9월 26일 이화여대생 3,000여 명이 독재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이화민주선언’을 발표하고 반유신 집회를 가졌다. 이대생들은 부마항쟁 발발 당일인 10월 16일에도 ‘민주회복 구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시위를 했다.

9월 27일 연세대학생 수백 명이 연고전 응원 연습 중 ‘유신철폐’를 외치며 교내 시위를 벌였고, 28일 고려대생들은 연고전 마지막 날 시가행진 중 반유신 선언문을 배포하였다. 연세대 학생 중 조영희, 박익서, 조영식 외 13명이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되었고, 고려대생 설훈, 강경탁, 이명식 등 3명이 구속되었다.

대학가의 거의 모든 시위들이 ‘민청협’과 긴밀한 속의 속에서 이루어졌음은 물론이다. ‘민청협’ 회원들이 전국 대학의 구속됐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민청협’은 10월 8일 ‘긴급조치 수형 학생들에 대한 병역문제 공청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주최자들이 잇달아 연행되어 무산되었다. 이우회, 송진섭 등이 구류 5일에 처해

졌다. 10월 9일 이른바 ‘남조선민족해방전선’의 수사 진행상황을 발표했는데, 구속자가 78명에 이르렀다. 10월 10일 NCC ‘교회와 사회 위원회’는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국회의원 제명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박형규, 한완상, 손학규 등이 연행되었다.

용암처럼 끓어오르던 노동자·농민·청년학생·지식인·문화예술인·언론인·종교인들의 완강한 저항과 투쟁은 마침내 10월 16일 부마항쟁으로 지각을 뚫고 터져 나왔다.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부산과 마산의 학생과 시민들에 의해서 4·19 혁명 이후 최대 규모의 반독재 민주항쟁이 일어났다. 먼저 부산에서는 10월 16일 오전에 시작된 부산대생들의 교내시위가 순식간에 4,000여 명으로 불어나면서 거리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오후에 부산시청 앞과 광복동, 남포동 일대에 집결한 학생들은 ‘유신 철폐’와 ‘독재타도’를 부르짖었다. 오후 늦게는 동아대생들의 합류로 더욱 확대된 시위 대열이 국제시장 일대를 게릴라식으로 종횡무진 누비고 다녔다. 시민들은 박수를 치고 경찰의 진압작전을 방해하며 쫓기는 학생들을 숨겨주는가 하면, 빵과 음료수, 담배, 물수건 등을 던져주며 열렬히 호응하고 시위대를 격려했다. 저녁 7시경에는 5~7만여 인파가 부영극장 앞 간선도로를 꽉 메운 채 시위의 물결을 이루었다. 퇴근길의 회사원과 노동자, 상인,接客업소 종업원, 재수생, 교복 입은 학생까지 가세하였다. 밤이 되어 시민들이 합세하자 시위는 거친 양상으로 바뀌어갔다. 파출소, 어용 신문사와 방송사, 경찰차에 돌을 던지고 방화하는 등 이튿날 새벽 2시 넘게 격렬한 시위를 전개하였다.

부산대가 긴급 휴교에 들어간 17일에도 시위는 비슷하게 전개되어 중구, 서구, 동구 지역의 거의 모든 파출소와 경찰서, 공공기관이 공격당했다. 이들간의 격렬한 시위로 경찰 차량 6대가 전소되고 12대가 파손되었으며, 21개소의 파출소가 불타거나 파괴되었다. KBS, MBC, 부산일보, 경남도청, 그리고 TBC-TV 취재차량이 투척 당하고 피해를 입었다. 당시 부산시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부상자는 16일 하루 동안에만 학생 5명, 일반 시민 10명, 경찰 95명 등 도합 110명으로서, 그 가운데 중상자는 18명이었다. 그러나 시민들로서는 자신신고를 기피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을 감안할 때 실제 피해는 그보다 훨씬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침내 18일 0시를 기해 부산 일원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전방 공수부대 2개 여단 5,000여 명이 부산에 투입되었다. 그러자 시위는 마산으로 번져 나갔다. 10월 18일 경남대학생 1,000여 명이 기동경찰 300여 명과 대치하다 투석전을 벌였고, 3·15의거탑에서 1,000여 명이 스크럼을 짜서 유신 철폐와 독재 타도 및 언론자유를 요구하는 시위를 전개하는 등 시내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었다. 저녁부터는 학생들과 시민 수천 명이 시내 중심가를 메우고 경찰과 투석전을 벌이는 대규모 군중시위를 전개하였다. 마산에서의 시위는 한층 더 격화되어갔다. 이번에도 역시 공화당사, 파출소, 방송국이 파괴되었다. 이에 인근의 창원, 진해, 함안 등지에서 경찰병력이 넘어오고 2개 중대의 군인까지 투입되어 시위대를 진압하였다.

경남대는 18일부터 무기한 휴교에 들어갔으나, 19일 학생들과 시

민들의 경찰차량 방화, 파출소·언론기관·관공서 등 공공기관에 대한 파괴행위가 계속되었다. 대학생과 일부 고교생은 물론, 노동자, 구두닦이,接客업소 종업원 등 도시 하층민들이 대거 가세하여 경찰·군인들과 충돌하면서 격렬한 시위를 벌여 나간 것이다. 그리하여 마산의 항쟁이 수출자유지역 노동자와 고교생까지 합세,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10월 20일 0시를 기해 마산과 창원 일원에 위수령을 발동하였다.

나흘간의 봉기를 통하여 부산에서 1,058명, 마산에서 505명 등 총 1,563명이 연행되었다. 군법회의에 회부된 87명(학생 37명, 일반인 50명) 중 단순 가담자 67명은 소가 취소되었고, 20명(학생 7명, 일반인 13명)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반 검찰에 송치된 31명(학생 26명, 일반인 5명)은 전원 소가 취하되었고, 651명(이 중 208명은 부산 봉기 학생)은 즉결심판에 회부되었다.

부마항쟁 이후에도 한국의국어대, 서울대, 대구 계명대 등 전국 각지에서 시위와 농성이 이어졌고, 마침내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피살로 유신독재 정권은 종말을 고하였다.

민청협은 10월 27일 12시에 긴급 운영위를 소집하였다. 이우회(당시 회장 대행), 이명준, 최열, 문국주, 홍성엽, 김경남, 양관수, 이신범 등 운영위원 거의 전원이 참석하였고, 이 자리에서 극히 소수의 이견이 있었으나 '박정희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르려는 것을 저지하는 것'을 당면의 과제로 결의하고, 함석헌, 윤보선, 박형규, 이문영, 천관우,

조화순 등 지도위원들과 NCC, 동아·조선투위, 자유실천문인협의회, 해직교수협의회, EYC, 동일·원풍·YH노조 등 연락 분담들을 정했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국장 지지’는 실패했다. 당시의 신중론·준비론을 넘어서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무언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느낌이었다. 짐작은 갔지만 힘이 달렸다. 11월 3일 국장은 진행되었고, 11월 12일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의 담화가 나왔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에 의한 이른바 체육관 대통령 선출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당일 곧바로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의 성명이 나왔다. ‘유신체제를 사실상 계속하겠다는 최 대행의 담화는 YH사건, 부산과 마산의 민중봉기에서 분명히 나타난 국민의 민주주의 열망을 전혀 배반한 것이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11월 13일 해직교수협의회, 자유실천문인협의회, EYC, 민청협 등 5개 단체가 ‘나라의 민주화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11월 15일 민청협과 EYC가 ‘유신체제의 조속한 청산과 민주사회수립을 촉구한다’는 민주화 선언을 한다. 당시 EYC 회장 송진섭이 구속당한다. 당일 ‘민주주의와 학원자유화를 위한 전국대학생협의회 부활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킨다. 11월 22일 서울대학 10개 서클 대표들이 ‘학원 민주화를 위한 성명’을 발표하고 총장에게 직접 전달한다. ‘학원 자치회 부활과 학도호국단 폐지, 구속학생 석방과 복학, 학내 언론자유 보장, 사복경찰의 학내 출입 금지’ 등의 내용이었다.

11월 15일 동아방송 기자들은 ‘자유언론을 위한 결의’를 천명하고, 연세대생들은 유신체제 즉각 청산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배포한다.

연세대생 김재훈, 조영희, 박익서 등이 그로 인하여 구속된다.

11월 23일 서울대 농대 각과 회장단이 ‘학원 민주화 성명에 대한 지지 선언서’를 발표한다. 정기정, 임의경 등이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구속된다.

11월 24일 ‘YWCA 위장결혼식 사건’이 터졌다. 조금 설명하자면, 1979년 10월 26일 유신정권이 종식되면서 민주화의 꿈은 부풀었다. 하지만 정치적 상황은 민주화운동 세력의 염원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어 갔다. 10월 27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고, 11월 12일에는 최규하 권한대행이 유신헌법대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그 후 민의를 모아 개헌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미 각계에서는 유신철폐와 계엄령 해제, 구속자 석방 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었고, 예를 들면 당시 예조각 출판사를 경영하던 임채정은 필자를 직접 불러 규모 있는 대중적 저항을 조직해야 한다며 적지 않은 돈을 건네주기도 했다.

이 무렵 윤보선 전 대통령이 안국동 자택으로 필자를 불렀다. 당연히 재야에서 반대 의견이 있을 터이고 무언가 행동이 나올 테니 신군부에서 돕겠다는 전달이 왔다는 내용이였다.

필자는 민청협 운영위에 그 내용을 보고하였다. 민청협 운영위에서 약간의 토론은 있었으나 결론은 버킹검, ‘있을 수 없는 일’로 정리되었다.

1979년 11월 13일 해직교수협의회, 자유실천문인협의회, 민주청년

협의회, 조선투위, 동아투위 등 5개 단체가 윤보선 전 대통령 자택에서 모임을 갖고 '나라의 민주화를 위하여'라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긴급조치 9호와 계엄령 해제, 언론자유 보장, 양심수 즉각 석방·복권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이 성명으로 이부영은 계엄포고령 1호 위반으로 구속되었고, 서남동, 이우정, 김찬국 등 해직교수들이 연행되었다. 이어 EYC가 유신체제의 조속한 청산과 민주사회 수립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다.

11월 19일에는 정치범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외신기자들에게 발표한 윤반웅 목사가 구속되었으며, 유신철폐와 학원 민주화를 요구하는 서울대생과 연세대생, 고려대생들의 시위와 유인물 살포로 학생들 수십 명이 연행·구속되었다. 11월 28일에는 광주 YWCA 연합기도회에서 광주기독교연합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남 해직교수협의회, 자유실천문인협의회 전남지부, 민청협 전남지부 등이 공동 명의로 '통대'에 의한 대통령 선거 반대와 민주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여 12명이 연행되기도 한다.

이러한 가운데 11월 24일, 명동에 위치한 YWCA 1층 강당에서 민청협 운영위원 홍성엽과 윤정민(가상 인물)의 결혼식이 열렸다. 최소 700여 명 이상의 하객들이 결혼식장에 가득 모인 가운데 신랑 홍성엽이 입장하였고, 그와 동시에 유인물이 살포되었다. 통대저지국민대회가 개최되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는 대통령은 반대한다', '거국민주내각 구성하라'는 등의 구호가 터져 나왔다.

이날의 통대선출저지국민대회는 함석헌을 대회장으로, 김병걸·임

채정·박종태·김승훈·양순직·백기완 등을 준비위원장, 그 밖의 해직 교수, 종교인, 헌정동지회, 문인, 기독교학생총연맹(KSCF), 민청협 등을 실행위원으로 하여 조직되었는데, 이들은 유신체제의 전면적 청산, 유정회·공화당·통일주체국민회의 해산, 거국 민주내각 수립, 김종필·이철승·이후락 등 유신체제 유지에 중추적 역할을 한 자들과 선 우회(조선일보 주필)·이동욱(동아일보 사장)·한태연(유신헌법 초안자)·정주영(전경련 회장)·김영태(한국노총위원장) 등 부패 특권분자들에게 대한 준엄한 심판, 군의 정치적 중립, 외세의 간섭 배제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대회장에 계엄군이 들이닥쳐 잡히는 대로 끌어내어 마구잡이로 연행하였다. 이런 상황까지를 예상하고 코스모스백화점 앞에 따로 모인 300여 명은 ‘유신철폐’와 ‘통대선거 반대’를 외치며 가두시위를 벌여 청계천까지 진출하였다. 여담이지만 권운상은 신신백화점 앞에 돼지를 풀어놓고 한바탕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건만 돼지 없이 사람들 시위만 하고 말았다. 계엄군은 이들을 막지 못하였고 사후적으로 일부를 체포하였다. 이날 사건으로 연행자는 모두 200여 명에 달했으며, 연행된 이들은 참혹한 구타와 고문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앓아야 했다.

11월 24일 당일 역할 분담은 미리 되어 있었다. YWCA 강당 현장에 있었던 이들은 거의 다 현장에서 체포, 연행되었고, 코스모스백화점 등 시내 가두투쟁 대오는 따로 조직되어 있었다. 현장팀과 80년 준비팀은 처음부터 분리되어 있었다.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가투에 나섰다는 민주화운동 일지의 서술은 고쳐 써야 한다.

80년 준비팀은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전국적 항쟁 대오를 실제로 조직하게 된다. 이명준, 문국주, 김경남, 이석표, 이호웅 등이 그들이다. 현장팀은 임채정, 이우회, 홍성엽, 최열, 양관수, 강기중(이 사람은 태권도를 평소 몸에 익히고 있던 터라 들어오는 군인들을 올려차기 내려찍기 등 맨 앞에서 중형무기 치달다가 잡혀가서 이우회, 홍성엽 못지않게 끔찍한 구타와 고문을 당한다) 등이었다.

대회장인 함석헌은 최민화가 택시로 모셔왔는데, 실제로 결혼식 주례인 줄 알고, 택에서 출발하셨다가 택시 안에서 “실은 ‘국민대회’ 대회장으로 모셔갑시다”라고 말씀드리자 담담히, “미리 좀 이야기를 해주지 그랬어?” 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이 대회에 참가했던 정진동 목사와 조순형 전도사는 충북 기장 월계교역자회의에서 이 사건을 폭로하면서 관련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감리교 청년(박일성, 김준곤, 이승봉)은 대회의 선언문을 광화문 일대에 살포하다가 즉결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11·24 ‘YWCA 위장결혼식 사건’에 대한 해석들은 음모론·함정론 등 각양각색이다. 당시 신문에 보도된 내용들은 윤보선 전 대통령이 정치적 야심을 품고 청년·학생들과 시민들을 부추겨 일으킨 사건이라는 것이었다. 보도된 사건의 구도는 윤보선 전 대통령이 제일 꼭 대기에 있고 그 바로 밑에 조성우가 있고 그 아래에 이우회(민청협 의장대행), 김정택(EYC 회장)이 있다고 했다. 전혀 아니올시다이다. 윤보선은 대회 당일까지도 까맣게 몰랐고, 공덕귀 여사는 결혼식 축의금까지 갖고 YWCA 현장에 오셨다. 그날 축의금은 제법 모였고 후일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대중투쟁 조직의 주된 군자금으로 쓰였다.

한두 가지 오해와 이해에 대해서 몇 마디 덧붙이자면, 김대중은 80년 1월 초 외신기자회견을 하면서 YWCA사건은 젊은이들의 경거망동이라고 규정하였다. 당시 정치인들은 어찌면 정치적 타협을 통하여 거꾸로 가는 군인들(하나회 전두환 등)과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찌 보면 실낱같은 기대를 걸고 있었고, 민주·민중운동 입장에서 이미 군부의 실체는 드러나 있었고 이를 극복·타도하기 위해서는 국민 대중들의 투쟁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

훨씬 뒤의 일이지만 임채정이 정계에 입문한 후 김대중이 임채정에게 물었다. “임 의원이 ‘YWCA 사건’에 개입하셨습니까?” 임채정의 답,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김대중은 다만 “그랬군요” 하고 말았다.

음모론·함정론이 어디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을까를 더듬어 보겠다. 임채정 당시 대회준비위원장이 이종찬(당시 중앙정보부)에게서 근자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군부의 지령에 의해 이종찬이 윤보선을 만나 신군부의 뜻을 전달한 바는 있으나 당시 군 내부 싸움에 겨루이 없을 신군부가 무슨 수로 재야까지 조종을 했겠는가, 만약 그랬다면 신군부는 참으로 전지전능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고 한다. 당시 윤보선의 말에 의하자면 전두환도 윤보선을 방문했을 수도 있을 법하다. 다만 거기까지였다.

김상현에 의하면, 전두환이 보안사에서 늘씬 두드려 맞고 있는 김상현에게 조니워커 블랙 한 병을 들고 와 회유를 거듭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전두환은 윤보선·김상현·독립유공자 아무개를 우선 포섭 대상으로 삼고 싶다는 뜻을 실토했다고 한다. 김상현은 단호히 거부했고, 당연히 더 두드려 맞았고 고문을 당하였다.

이우회·홍성엽 등이 유서를 품에 안고 감행한 YWCA사건에 대한 억측과 오해는 이제 그만하였으면 좋겠다.

이 글은 NCC 인권위원회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꼼꼼히 정리한 민주화운동 일지에 크게 기대었음을 밝힌다. 또한 일지에 나타나지 않은, 아니 훨씬 더 많은 사건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로 미움을 양해해주기를 바란다.

YWCA사건에 대한 기록도 추후 더 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 ~~까지~~